

“큰일 하고서도 널리 알려지지 않아 문제”

‘거대한 정보은행’ 정부간행물 출판실태…유통구조개선 및 판매활성화 시급

재벌기업의 정보 수집·생산력이 아무리 탁월해도, 정부기관은 한 국가의 “최대 정보생산기관”이자 “거대한 정보은행”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소련 최고권력자의 공식직함이 書記長이었고, 북한의 그것은 祕書인 데서도 알 수 있듯 권력과 정보력은 동전의 양면이다. 그러므로 “국가기관의 명령과 경제적 부담으로 간행된 모든 기록·도서·정기간행물”(UNESCO가 내린 정의)인 정부간행물은 가공만 잘 하면 보화·보배가 될 수 있는 서말의 구슬이다. 특히 정보화사회라 회자되는 현대 사회에서는 국민 개개인의 정보력이 곧 국력으로 직결되는 마당에 고급스런 ‘원초적 자료’의 공개의 의미는 더욱 지중해진다. 실증주의자를 자처하는某교수가 매일 「서울신문」을 탐독하는 수고로움을 덜어줄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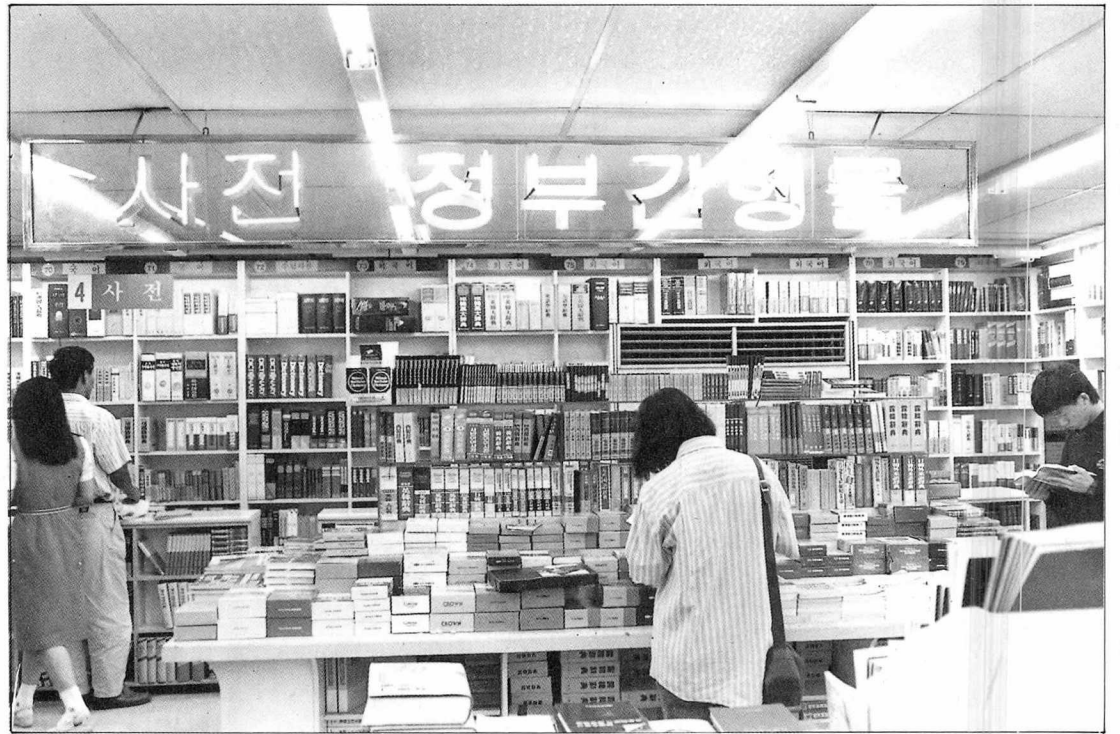
선진외국의 경우 정부간행물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정보이용의 극대화를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심지어 국제기구의 간행물도 민간출판사와의 제휴로 상품으로서의 경쟁력을 키워나간다. 그에 대한 좋은 일례를 우리는 한울출판사의 ‘농원보 건문고’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간된 간행물이 국내 출판사에서 번역출간 되기 시작한 것이다.

최대의 정보은행인 정부간행물

우리나라의 정부간행물은 그러나 생산·보급·판매·전과정에 걸쳐 딱딱하고 관료적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것은 저널리즘의 표현 대로라면 “총체적 혼란”(「시사저널」, 93년 3월 25일지)의 형국이고, 아카데미즘의 표현을 옮기자면 “지루하고 따분한 관료적 보고물”이라는 부정적·동속적 견해로 인해 일반대중들에게 효용가치가 적은 정보원으로 인식되어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도서관 자료로서의 수집과 활용 등 전반적인 관리에서도 크게 미흡한 것”(「한국 정기간행물 발간 실태분석과 이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배영환, 「도서관」 94년 봄호)이다.

그런데 근래들어 우리나라 정부간행물에 대한 일반의 통념을 깨는 몇가지 사례들이 나타나 주목을 끈다. 첫째, ‘베스트셀러’가 출현했다. 둘째, UR홍보책자를 광고대행사에 의뢰한 ‘사건’이 발생했다. 셋째, 정부간행물의 판매를 외부업자에게 맡기는 사례가 늘고있는 현상이 그것이다.

베스트셀러의 주인공은 「정부 생활민원 이



정부간행물 판매센터의 하나인 종로서적의 정부간행물 코너.

렇게 해결하십시오」 「법과 생활」 「시민생활백과」 등으로 출간 한달만에 2만여부를 상회하는 판매실적을 올렸다. ‘9월이 무가지(비매품)’인 정부간행물 실태에서 제값을 받으면서도 많이 팔린 것이다. 공보처 홍보과 김기만 사무관은 “정부간행물에 관한 정책을 보급·판매 부문의 활성화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며 “발행 종수를 줄이더라도 국민에게 가독성 있는 책을 퍼내는 쪽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전한다.

UR의 불가피성을 국민에게 설득하는 홍보 책자를 전문광고대행사인 제일기획에 외주를 준 일은 정부간행물사상 최초의 시도로 기록된다. 정부측의 실무자인 공보처 협력1과 양홍석 사무관은 “딱딱하고 재미없는 주입식이란 官의 낡은 때문에 외면당해온 정책광고물을 색다르게 만들어 관심을 끌여보자는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진 셈”이라고 말했다. 일반 국민, 여론지도층 등 독자대상에 따라 6종류로 발간예정인 이 책자는 현재 농민용이 첫 선을 보였다. 공보처의 한 관계자는 “UR홍보 외에도 지난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정치개혁입법은 물론 국가경쟁력강화방안,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사업 등 정부의 주요정책 홍보를 앞으로 광고대행사에 맡길 것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정부간행물 최대의 취약점으로 꼽히는 배포·유통문제를 모범적으로 해결한 사례도 있

다. 환경처의 「한국환경연감」이나 국립민속박물관의 여러 책자 등은 출판사·서점과 협약을 맺어 제작·판매를 하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공보처의 관계자들은 “프레스센터내에 정부간행물 상설종합전시장을 설치하고, 우편주문판매나 책광고 등도 시행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전한다.

그밖에도 최근의 정부간행물에는 예전의 “유인물에 표지만 붙인 격”인 것들 일색에서 다양한 형태와 내용의 책자들이 더러 눈에 띈다.

“유통구조개선, 판매활성화 방안 마련중”

정부측의 관계자들은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정부간행물의 유통구조 난맥상과 판매 부진에 대해 나름대로의 개선·활성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입을 모은다.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책을 만들도록 “유도중”이며, 민간출판업자와의 협력하에 판매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고치고, 내년 예산에 반영 하려고 “검토중”이란 답변이다. 공세적인 홍보전략 수립 등 정부관계자들의 의욕이 돋보이고, 최근 일련의 가시화된 몇몇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책 전환’에 대한 일반국민과 연구자들의 체감온도는 예전과 별 차이 없다는 반응이다.

한국 정부간행물에 대한 최초의 학위논문인 「한국 정부간행물에 대한 연구」(최정태, 연대

교육대학원 73.2)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아직도 지적되고 있다. 그 이후 몇 편의 관련 석사논문이 더 산출됐지만 그 결론부분은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다. 일례로 89년도 연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인 정종훈씨의 「정부간행물 관리제도에 대한 고찰」에서 지적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관리환경이 매우 취약하다. 정책적 우선과제들이 산적한 이유로 정보관리는 행정의 우선순위상 하위에 머물고 있다는 것. 1975년에 정부간행물 발간예산은 약 17억원으로 중앙정부 예산의 0.099%이던 것이, 88년에는 51억원으로 0.029% 수준으로 떨어졌다.

둘째, 인적자원의 관리가 불합리하다. 이같은 지적은 최근 공무원사회에서 민간기관 연수·민간기관 운영체제 도입, 우수 인력 스카우트 등의 활발한 변신을 통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정부측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셋째, 제도적 장치의 불합리성.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간행물의 생산 및 배포의 효율적 조정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부간행물심의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91년 12월에는 정부간행물의 전문적 기획·제작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보처에 정부간행물제작소를 설립하는 등 그동안 다원화된 정부간행물의 인쇄 및 행행을 일원화시키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정

